

지방소멸 위험과 지역고용의 상관관계 분석*

강 동 우**

I. 머리말

한국은 2001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으로 떨어져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초저출산 현상을 경험한 11개 OECD 국가 중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1.3명 이상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5). 또한 인구의 고령화가 지속되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16년 13.6%에서 2017년에는 14.2%로 증가하였고, 2017년에 처음으로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8). 이러한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한국은 2031년에 총인구가 정점을 보인 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통계청, 2016).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지역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과 대부분의 대도시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고령인구 비중을 보이고 있지만, 전남, 경북, 전북은 19% 이상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8). 특히 전남, 경북 등 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한 광역자치단체의 일부 군 지역에서는 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지역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상호(2016)는 이러한 우려가 단지 일부 지역의 위기가 아니라 다수의 기초자치단체 시군구가 ‘지방소멸’을 경험할 수 있다는 통계적 근거를 제시하여 지방소멸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연구는 ‘일본창성회의’ 의장인 마스다 히로야(2015)의 저서 『지방소멸』을 참고하여 소멸위험지수를 제시하고, 2014년 기준으로 79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가 소멸위험에 처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2018년 기준으로 이를 최신화한 후속 연구에서는 소멸위험 지역이 89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호, 2018).

이상호(2016)의 연구 이후, 지방소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방소멸, 축소도시, 일본의 지방창생전략 등을 주제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지역 정책 방안에 대한 연구

* 이 글은 강동우 외(2018), 『인구구조 변화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역고용정책 사례 연구』의 제1장 및 제5장, 구형수 외(2018),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전략』의 제3장의 일부를 발췌·정리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dwkang1982@kli.re.kr).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 주요 선행연구들은 지방소멸의 현황 및 추세 분석 이외에 일본의 지방창생전략, 독일 등 해외의 축소도시 및 지방소멸 실태를 살펴보았다(김순은, 2017; 이희연·한수경, 2014; 권용석, 2018). 또한 국토계획, 도시재생, 지역개발, 지역산업 정책 측면에서 한국의 지역정책 방향을 탐색하였다(마강래, 2017; 구형수, 2018; 김선배, 2016). 반면 지역고용 측면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이며 대략적으로만 다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한계는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역에서 인구 유지와 증가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고, 따라서 일자리 정책보다는 인구 정책과 이와 관련된 지역 정책이 우선시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지역의 고용과 인구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지역고용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구증가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지방소멸 위험과 지역고용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역고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지방소멸과 지역고용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를 설명하고, 지표 간의 단순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제Ⅲ장에서는 인접지역과의 공간적 상관관계(spatial correlation)를 고려한 회귀분석 모형을 통해서 지방소멸과 지역고용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역고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지방소멸과 지역고용의 상관관계 탐색을 위한 지표

1. 분석 지표와 자료

지역의 고용 상황이 지방소멸 위험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지역고용의 지표로 지역 수준에서 측정되는 경제활동참가율(이하 경활률), 고용률, 실업률을 선정하였다. 이상의 지표에 대한 통계청 자료를 확인하였을 때, 가장 작은 지역 단위는 기초자치단체 시·군이며, 광역대도시의 구 및 군에 대한 지표는 가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역대도시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의 경우, 각 지역 전체를 하나의 지역 단위로 설정하여 고용지표를 구성하였다. 반면 도 지역은 기초자치단체 시·군을 하나의 지역 단위로 고용 지표를 구성하였고,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주도 전체를 하나의 지역 단위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고용지표는 통계청 KOSIS의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구축되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등

9개 지역의 고용지표는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연간 자료 중 2017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 외 도 지역의 152개 기초자치단체 시·군별 경찰률, 고용률, 실업률은 ‘지역별고용조사’ 2017년 하반기 자료로 구축하였다.

지방소멸 지표는 이상호(2018)가 산출한 ‘소멸위험지수’ 중 2018년 6월 지역별 지수를 사용하였고, 고용지표의 경우과 같이 8대 대도시와 제주도, 152개 기초자치단체 시·군별 등 161개 지역에 대해서 구축하였다. ‘소멸위험지수’는 식 (1)과 같이 정의되며, KOSIS의 지역별 주민등록인구 통계로 계산되었다. ‘소멸위험지수’는 지수가 작아질수록 지방소멸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해석된다(지수가 ‘0’에 가까워질수록 소멸에 가까워짐). 이상호(2018)는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지역을 ‘소멸위험지역’으로 보았으며, 소멸위험지수가 0.2~0.5 미만인 경우 ‘소멸위험 진입 단계’, 0.2 미만인 경우를 ‘소멸고위험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text{소멸위험지수}) = \frac{(20 \sim 39\text{세 여성 인구수})}{(65\text{세 이상 고령인구수})} \quad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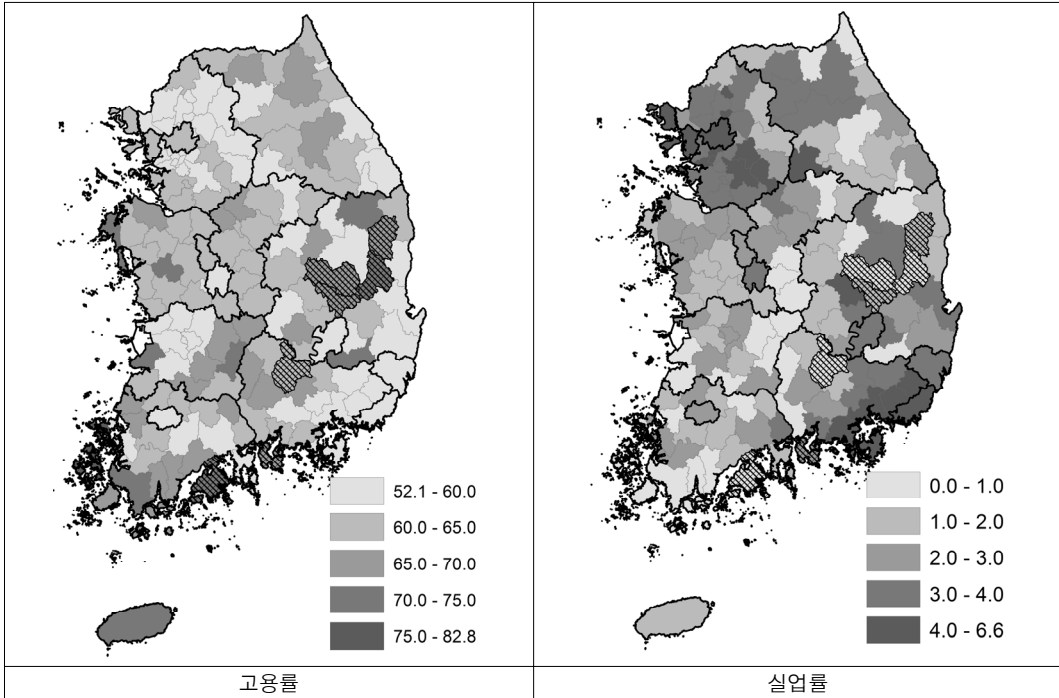
2. 고용지표와 지방소멸 지표 간 단순 상관관계

고용지표와 지방소멸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고용률 및 실업률과 소멸고위험 지역의 지리적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에서 교차선이 채워진 지역은 소멸위험지수(이상호, 2018)가 0.2 미만인 소멸고위험 지역으로 총 7개 지역(영양군, 청송군, 남해군, 함천군, 군위군, 고령군, 의성군)으로 나타났다. 고용률과 소멸고위험 지역의 지리적 분포를 살펴보면, 8대 대도시 이외 지역에서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7개 소멸고위험 지역의 고용률은 64.2~71.9%로 전국 평균 60.8%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실업률과 소멸고위험 지역의 공간분포를 살펴보면, 8대 대도시에서 대체로 실업률이 높으며 소멸고위험 7개 지역의 실업률은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소멸고위험 7개 지역의 실업률은 0.2~2.5%로 전국 평균 3.7%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1>은 경찰률, 고용률, 실업률과 지방소멸 지표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보이고 있다. 161개 전체 지역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1]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경찰률과 고용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경찰률 또는 고용률이 높을수록 소멸위험이 높아지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실업률은 소멸위험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 소멸위험이 낮아지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대상을 ‘자치단체 군 77개 지역’으로 한정하더라도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분석지역을 ‘자치단체 시 75개 지역’으로 한정할 경우, 실업률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림 1] 고용률, 실업률, 소멸고위험 지역의 공간 분포(2017년)

(단위 : %)



주 : 지도에서 교차선이 채워진 지역은 소멸위험지수(이상호, 2018)가 0.2 미만으로 소멸고위험 지역을 의미함.
 자료 : 통계청, KOSIS;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청, SGIS.

<표 1> 일자리 지표와 지방소멸 지표 간 상관관계

	8대 대도시, 제주도, 시·군 (161개 지역)	시·군 (152개 지역)	시 (75개 지역)	군 (77개 지역)
경황률	-0.39***	-0.41***	0.17	-0.28**
고용률	-0.48***	-0.49***	0.03	-0.33***
실업률	0.69***	0.70***	0.56***	0.47***

주 : *** P-value < 1%, ** P-value < 5%, * P-value < 10%
 자료 : 통계청, KOSIS;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이상호(2018).

이상의 분석결과를 지역고용 상황이 보다 양호할수록 지방소멸 위험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역고용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자리 지표와 지방소멸 지표 간 단순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지역 자료 분석에서 빈번히 발견되는 공간적 상관관계(spatial correlation)를 통제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있다. 지역 간 통근은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개별 지역노동시장권은 시·군 수

준의 행정구역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윤윤규 외, 2012). 따라서 인접 대도시에 대한 접근성, 주변 지역의 고용상황 등 공간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수와 지역경제 변수는 높은 관련성을 보일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수준에서 관측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공간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누락 변수에 의해서 편이가 발생할 수 있고(LeSage and Pace, 2009: 60-68), 일자리 지표와 지방소멸 지표 간 단순 상관관계도 이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제Ⅲ장에서는 인접지역과의 공간적 상관관계를 고려한 회귀분석 모형을 통해서 지방소멸과 지역고용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Ⅲ. 회귀분석을 통한 지방소멸과 지역고용의 상관관계 분석

1. 분석모형

인접지역과의 공간적 상관관계를 고려한 회귀분석 모형은 식 (2)와 같다. 회귀모형의 종속변인으로 2018년 6월 기준 소멸위험지수(이상호, 2018)를 사용하였다. 설명변인에는 제Ⅱ장에서 설명한 2017년 기준 고용률, 실업률을 포함하였다(경활률은 다중공선성 문제로 제외). 이외에 지역의 보육환경을 반영하기 위해서 통계청 KOSIS에서 제공되는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를 포함하였다. 이와 함께 도시 지역의 규모 및 특성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통제변수로 ‘8대 대도시 및 제주도’를 나타내는 지역 더미와 도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시’ 지역을 나타내는 지역 더미를 추가하였다. 지역경제의 공간적 상관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우선 각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8대 대도시까지의 거리(행정구역의 중심점 간 직선거리)’를 포함하여 대도시 광역경제권에 대한 접근성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또한 ‘인접지역¹⁾의 고용률 및 실업률 평균값’을 모형에 포함하여 지역노동시장 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begin{aligned}
 (\text{소멸위험지수})_i &= \beta_1 + \beta_2(\text{고용률})_i + \beta_3(\text{실업률})_i + \beta_4(\text{보육시설 수})_i & (2) \\
 &+ \beta_5(\text{8대 대도시 및 제주도 더미})_i + \beta_6(\text{기초자치단체 시 더미})_i \\
 &+ \beta_7(\text{최근접 대도시로부터 거리})_i \\
 &+ \beta_8(\text{인접지역 평균 고용률})_i + \beta_9(\text{인접지역 평균 실업률})_i + \epsilon_i
 \end{aligned}$$

1) 인접지역은 GeoDa(GeoDa Center, 2018)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행정구역의 면 또는 모서리가 닿아 있는 지역으로 정의한다(precision=1 적용).

<표 2>는 회귀분석 모형에 포함된 변인의 요약 통계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161개 지역에 대한 평균 소멸위험지수는 0.615이며, 8대 대도시 및 제주도 등 9개 지역의 평균은 1.082, 시 지역과 군 지역의 평균 소멸위험지수는 각각 0.872 및 0.310으로 나타나 대도시보다는 시 지역에서, 시 지역보다는 군 지역에서 소멸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61개 지역의 평균 고용률은 62.1%, 대도시 및 제주도는 60.8%, 시 지역 58.8%, 군 지역 65.6%로 군 지역의 고용률이 대도시 및 시 지역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161개 지역의 평균 실업률은 2.4%, 대도시 및 제주도는 3.5%, 시 지역 3.1%, 군 지역 1.5%로 군 지역의 실업률이 대도시 및 시 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61개 지역의 평균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는 15.0개, 대도시 및 제주도는 14.4개, 시 지역 17.1개, 군 지역 13.0개로 군 지역의 보육시설 수가 대도시 및 시 지역보다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간적 상관관계 측면을 살펴보면, 8대 대도시 중 가장 가까운 대도시로부터의 직선거리 평균은 22.0km이고, 시 지역은 54.5km, 군 지역은 70.0km로 군 지역이 평균적으로 대도시로의 접근성이 낮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인접지역의 평균 고용률 및 실업률은 각각 59.5% 및 2.4%로 나타났다.

<표 2> 변인별 요약 통계

	전체(161개 지역)				8대 대도시 및 제주도 (9개 지역)	시 (75개 지역)	군 (77개 지역)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평균	평균	평균
소멸위험지수	0.615	0.418	0.151	1.816	1.082	0.872	0.310
고용률(%)	62.1	5.1	52.1	82.8	60.8	58.8	65.6
실업률(%)	2.4	1.4	0.0	6.6	3.5	3.1	1.5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개)	15.0	3.5	6.9	26.8	14.4	17.1	13.0
8대 대도시 및 제주도 지역 더미	0.1	0.2	0.0	1.0	1.0	0.0	0.0
시 지역 더미	0.5	0.5	0.0	1.0	0.0	1.0	0.0
8대 대도시 중 가장 가까운 대도시로부터의 직선거리(km)	60.1	42.6	0.0	260.7	22.0	54.5	70.0
인접지역 평균 고용률(%)	59.5	12.0	0.0	67.7	53.9	60.4	59.4
인접지역 평균 실업률(%)	2.4	1.0	0.0	4.6	2.5	2.8	1.9

주 : 소멸위험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소멸에 가까워짐을 의미함.
 자료 : 통계청, KOSIS;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 회귀분석 모형의 추정결과

<표 3>은 회귀분석 모형의 추정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회귀분석 모형은 이상호(2018)의 첨부자료 중에서 지역별 2017년 주민등록인구를 가중치로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표준오차는

강건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로 계산하였다. 추정결과에서 모형 1은 지역경제의 공간적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기본 모형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고용률과 실업률의 추정계수가 모두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여, 보다 양호한 지역고용 상황은 소멸위험을 완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표 1>의 단순 상관관계 분석에서 고용률이 부(-)의 관계를 보인 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단순 상관관계 분석만으로는 지방소멸과 지역고용의 관계가 부정확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육시설 변인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도시 지역을 통제하는 더미변인들(광역대도시 및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시)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여 도시 지역에서 지방소멸 위험이 농촌 지역에 비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회귀분석 모형의 추정결과

종속변인 : 소멸위험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추정치	표준화 계수	추정치	표준화 계수	추정치	표준화 계수
상수항	-1.933***		-2.197***		-1.502*	
고용률	0.029***	0.292	0.038***	0.375	0.033***	0.330
실업률	0.131***	0.427	0.093***	0.303	0.058*	0.188
유아 천 명당 보육시설 수	0.010	0.080	0.010	0.076	0.013	0.101
8대 대도시 및 제주도 더미	0.503***	0.764	0.452***	0.686	0.413***	0.627
시 지역 더미	0.645***	0.979	0.702***	1.067	0.671***	1.020
최근접 8대 대도시로부터의 직선거리			-0.003***	-0.356	-0.004***	-0.442
인접지역 평균 고용률					-0.007***	-0.179
인접지역 평균 실업률					0.032	0.100
관측치	161		161		161	
Adjusted R ²	0.453		0.520		0.536	

주 : *** P-value < 1%, ** P-value < 5%, * P-value < 10%. 각 지역별 주민등록인구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함. 표준오차는 강건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s)로 계산함. 추정계수의 해석 : 소멸위험지수가 0에 가까워질수록 소멸에 가까워짐. 따라서 추정계수의 방향이 정(+)인 경우, 설명변수 한 단위가 증가할수록 추정계수 크기만큼 지방소멸 위험이 낮아짐을 의미함. 추정계수의 방향이 부(-)인 경우, 설명변수 한 단위가 증가할수록 추정계수 크기만큼 지방소멸 위험이 커짐을 의미함.

모형 2는 모형 1에 ‘가장 가까운 대도시로부터의 거리’를 추가하여 분석한 추정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는 모형 1과 대체로 유사하나, 고용률의 표준화 계수가 실업률의 경우보다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실업률보다 고용률이 지방소멸 위험을 낮추는데 더욱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모형 2에 추가된 ‘대도시로부터의 거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효과를 보여, 대도시로부터 멀어질수록 지방소멸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 경제권으로부터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일수록 지방소멸 위험이 높은 것으로 해

석될 수 있겠다.

모형 3은 모형 2에 ‘인접지역의 평균 고용률과 실업률’을 추가하여 분석한 추정결과를 나타낸다. 모형 1~3 중에서 Adjusted R²로 판별한 모형 적합도(model fit)는 모형 3이 0.536으로 가장 높았다. 추정결과는 대체로 모형 2와 유사하나, 실업률의 추정계수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률은 추정계수의 크기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를 나타냈다. ‘인접지역의 평균 고용률과 실업률’의 추정계수의 경우, 전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효과를 보여, 인접지역의 고용률이 높을수록 해당 지역의 지방소멸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접지역의 실업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인접지역에 보다 많은 고용기회가 있을 경우, 지역 인구유출을 촉진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지역 더미변수들을 제외하였을 때, ‘대도시로부터의 거리’ 변수의 표준화 계수가 가장 큰 값을 보여 대도시로부터의 접근성이 지방소멸에서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해당 지역의 고용률과 인접지역의 고용률이 주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IV. 정책 시사점

본 연구는 지방소멸 위험과 지역고용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역고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상호(2018)의 ‘소멸위험지수’와 지역별 고용률 및 실업률을 지표로 이용하여 지방소멸과 지역고용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지표 간의 단순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지역경제의 공간적 상관관계를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접지역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회귀분석 모형을 통해서 탐색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서 지역의 고용률이 높을수록 지방소멸 위험이 낮아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의 공간적 상관관계가 지방소멸에서 중요한 요인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지방소멸에서 중요한 측면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의 보다 많은 일자리 기회는 주변지역의 지방소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할 때, 지역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지방소멸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한 지역의 고용개선은 인접지역에 위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소멸의 가능성이 큰 권역에서는 특정 지역에 제조업 기업 유치와 같은 대량의 일자리 창출 방안보다는, 군 지역의 읍·면 지역에 작지만 지역사회의 활력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빈집 개·보수, ‘고향사랑 기부제’(기획재정부, 2018)와 연계한 지역특산품 답례 활성화 등에서 지역 기반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작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겠다. 우선 인구감소에 따라 빈집이 증가하는 지역에서의 개·보수 작업에 지역주민, 지자체, 관련 사회적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특히 사회적기업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빈집 개·보수 작업에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은 읍·면 중심지로부터 동일 생활권에 있는 마을의 빈집 리모델링에 참여하고,²⁾ 이 과정에서 지역 출신의 청년, 이주자, 지역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고용에 비례해서 추가적인 사업비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 이러한 방식은 애항심을 갖춘 지역 기반의 기업이 빈집 리모델링에 참여하여 보다 책임 있는 빈집 개·보수가 진행되고, 지역에서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여 장기적으로 지역 인구증가에도 긍정적인 것이라 기대된다.

다음으로 ‘고향사랑 기부제’(기획재정부, 2018)와 연계한 지역특산품 답례 활성화를 통해서 마을기업의 육성과 지역 고용창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 일본의 경우, 개인이 지역을 위해 세금의 일부를 타 지역에 기부하는 ‘고향납세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고향납세를 한 당해에는 소득세 공제, 이듬해에는 주민세 감세 등의 세제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고향납세의 세제 혜택과 함께 주목할 부분은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 고용에 긍정적인 수 있다고 판단된다. 고향납세 기부금을 지역 특산품의 개발, 생산, 유통에 활용할 경우, 수익 창출은 물론이고 인건비가 지급되면서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에서 2019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기부금이 지자체별 마을기업에서 지역특산품 생산 및 기부자에 대한 답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기반의 마을기업이 지역주민의 고용과 수익 창출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KLI**

[참고문헌]

- 강동우·고영우·김현지·남수연·전은하(2018), 『인구구조 변화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역고용정책 사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구형수(2018), 『소멸위기의 지방중소도시 근린지역, 맞춤형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국토정책

2) 해당 읍면 중심지에 적합한 사회적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시군 또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적기업 네트워크를 통해 이를 공고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겠다.

- Brief』 2018년 9월호, 국토연구원, pp.1~6.
- 구형수·배유진·윤세진·강동우·조성호(2018),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권용석(2018), 『지방소멸의 실태 및 극복 정책-독일』, 『도시문제』 53(592), 대한지방행정공제회, pp.32~35.
- 김선배(2016),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산업 정책의 방향』, 『도시문제』 51(577), 대한지방행정공제회, pp.20~23.
- 김순은(2017), 『일본의 지방창생정책』, 『공공정책연구』 33(2), pp.25~54.
-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2020』.
- 마강래(2017), 『지방도시 살생부: ‘압축도시’만이 살길이다』, 개마고원.
- 마스다 히로야(2015), 『지방소멸』, 김정환 옮김, 와이즈베리.
- 윤윤규·배기준·윤미례·이상호·최효미·김준영·신인철·정준호(2012), 『한국의 지역노동시장권 2010: 방법론, 설정 및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 이상호(2016),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지역고용동향브리프』 2016년 봄호, 한국고용정보원, pp.3~17.
- _____(2018), 『한국의 지방소멸 2018: 2013~2018년까지의 추이와 비수도권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지역고용동향브리프』 2018년 7월호, 한국고용정보원, pp.2~21.
- 이희연·한수경(2014), 『길 잃은 축소도시 어디로 가야 하나』, 국토연구원.
- 통계청(2016), 『보도자료: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 _____(2018), 『보도자료: 2017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
- LeSage, J. and R. K. Pace(2009), *Introduction to Spatial Econometrics*, Chapman and Hall/CRC.
- GeoDa Center 홈페이지, <http://spatial.uchicago.edu>(2018. 10. 11 접속).